

별첨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37 - 1호
보고 일자	2019. 4. 12.

보고사항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

제출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출 일자	2019. 4. 12.

목 차

I. 연구용역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연구용역 주요내용	2
1.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략	2
(1) 추진실적 및 미진사항	2
(2) 향후 중점과제 및 전략	3
2.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검토	4
(1)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의 타당성 여부 검토	4
(2)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시 고려요소	5
(3) 전북 혁신도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6
III. 향후 정책방향	7
[참 고] 금융중심지 지정절차	8

I. 연구용역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 '08년 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해온 그간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
- ☐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및 금융중심지로의 발전방안 검토 필요

*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를 근거지로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지역공약] ”

2 추진경과

- ☐ 제3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8년중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쟁점사항 검토 필요성 논의('17.9.15)
- ☐ 용역수행기관 선정절차 완료 및 계약체결('18.5.24)
 - (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 (연구기간) '18.5.24 ~ '18.12.21
 - (연구내용)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및 추진전략 수립,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및 고려요건 검토, 전북 혁신도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등
- ☐ 제34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18.6.20)
-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제출('18.8.24)
- ☐ 금융연구원, 연구내용 보완 필요성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약 1개월 연장 요청('18.12.19)
- ☐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19.1.31)

Ⅱ. 연구용역 주요내용

1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및 향후 전략

(1) 추진실적 및 미진사항

- '03년 동북아허브 정책 추진 이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국제화 지표가 크게 개선

금융중심지 사업 추진('03년) 이후 금융국제화 지표 비교

주요 지표	'03년	'17년	증가율(배)
주식 외국인 보유액(조원)	143	636	4.4
국채 외국인 보유액(조원)	0.5	78.3	156.6
코스피200선물 외국인 투자비중(%)	16.36	63.37	3.9
자산운용사의 해외투자 비중(%)	0.89	22.56	25.3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개)	213	431	2.0

- 그러나 '16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 진입수 감소, 국제적 인지도 하락으로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은 아직 기대수준에 미흡

-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 수는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6년 168개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

* ('07) 137 ('09) 149 ('11) 153 ('13) 161 ('15) 166 ('16) 168 ('17) 165 ('18) 163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의 경우, 해외점포 수, 자산·이익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전체 규모 대비 비중*은 아직 낮음

* ('10) 4.0% ('12) 4.2% ('14) 4.8% ('16) 5.1% ('17) 4.8%

- '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부산은 10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일부 실적도 보였으나 다소 미진한 점이 있음

-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철수도 일부 나타남

구 분	서 울 (여의도)	부 산 (문현단지)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금융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CI 순위하락 - ('15.3) 7 ('17.3) 24 ('18.9) 33 ('19.3) 36 ■ 외국계 금융회사 일부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CI 순위하락 - ('15.3) 24 ('17.3) 50 ('18.9) 44 ('19.3) 46 ■ 외국계 금융회사 입주 全無

[2] 향후 중점과제 및 전략

①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육성 지속 추진

- '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목표대로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위주의 규제강화, 소득 및 위험 보장 등을 위한 자산관리 수요 증대로 자산운용업이 유망업종으로 부각

②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

-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관련제도와 규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금융회사의 물리적 개설 필요성이 낮은 영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선점 노력 강화

③ 고령화 대비 금융업 육성

- 고령화와 저금리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필요
 -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연기금 투자의 운용수익률 제고, 신탁업 체계 개편 등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중점 추진

④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진입여건 개선

- 금융산업 발전, 법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외국 금융회사들의 국내 진입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
 -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강화를 통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금융중심지 홍보를 내실화할 필요

(1)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타당성 여부 검토

① 추가지정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금융중심지 상호간에 경쟁 촉진 또는 보완 발전이 가능하며, 지역기반에 특화된 새로운 모델 출현 가능
- (부정적 효과) 선정도시간 핵심역량 분산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도시가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정책회귀가 어려움

②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성과 미흡

-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화는 미흡한 수준
-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option)의 하나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 가능

③ 경제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간 상관관계 불충분

- 경제규모와 금융중심지의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금융중심지는 1~2개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움

	'17년 GDP(십억달러)	GFCI에 포함된 도시(GFCI 2017)
한국	1,538	서울(27) 부산(46)
캐나다	1,652	토론토(7) 몬트리올(13) 밴쿠버(15) 캘거리(38)
일본	4,872	도쿄(5) 오사카(23)

➡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성고가 미흡했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추가 지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는 법령상 고려요건, 기존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

[2]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시 고려요소

[1] 금융중심지법상 심사요건

- 후보도시의 현재 여건과 발전 가능성, 향후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금융중심지법상 요건에 부합할 필요

< '09.1월 금융중심지 지정 심사시 평가요소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 >

국제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중심지 모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경영환경·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수준
지자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활성화에 기여
사회적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2]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지역이 기존 금융중심지의 일부 기능을 이전받는 방식은 지역간 갈등,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따라서, 뚜렷하게 차별화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거나 기존 도시 기능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함

[3] 금융과 실물의 균형

- 경제 활동으로 창출되는 금융수요가 건조하게 존재하여야 금융과 실물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 지역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평가도 선행될 필요

* 세계적인 금융중심지인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세계경제의 중심지 또는 무역항이라는 튼튼한 실물경제가 기반이 되었음

➡ 후보도시가 법령상 심사요소에 부합하고,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추가 지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3) 전북 혁신도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 ◇ 현재 전북 혁신도시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
-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할 여건을 만들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

① 전북의 금융산업 관련 현황

- 전북의 금융산업 현황은 서울에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으나 전국 또는 부산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전북 및 기존 금융중심지의 금융 및 보험업 산업 비중

지역	내용	사업체수(개)	비율	종사자수(명)	비율(%)
전북	전체 산업	147,505	-	675,948	-
	금융 및 보험업	1,705	1.16	25,585	3.79
서울	전체 산업	820,156	-	5,079,451	-
	금융 및 보험업	10,955	1.34	269,712	5.31
부산	전체 산업	283,554	-	1,408,615	-
	금융 및 보험업	3,264	1.15	50,901	3.61
전국	전체 산업	3,950,192	-	21,259,243	-
	금융 및 보험업	42,710	1.08	725,554	3.41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 산업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6)

- 다만, 지역총생산에서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전북이 3.89%로, 전국평균(4.93%), 서울(10.77%), 부산(5.85%) 보다 낮은 수준

행정구역(시도)별 금융 및 보험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

비중순위	행정구역	지역내총생산(백만원)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비중%
-	전국	1,635,555,375	80,570,652	4.93
1	서울	357,080,717	38,471,647	10.77
3	부산	81,198,436	4,748,740	5.85
7	전북	46,880,492	1,825,854	3.89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016)

- 연기금 관련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며, 최근 2개의 해외수탁은행이 전주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

* 18년말 기준 운용역 정원 278명中 36명 결원(7실, 1센터, 3개 해외사무소에서 303명 근무)

** 17년말 운용규모 622조원으로, 일본(1,590조원)·노르웨이(1,137조원)에 이어 세계 3위

②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서 평가 및 발전방향

①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 조성

-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한 상황
 - 또한, 정주여건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정착도 주요 과제임
-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 필요
 - * 최근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운용본부의 해외수탁은행인 State Street Bank와 Bank of New York Mellon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얻는 대로 전주 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임

②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와의 연계성 제고

- 전북 혁신도시가 추진하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 일부에서는 단순히 농생명과 금융을 기계적으로 연계하여 농업관련 금융회사인 농협 본점의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으나, 농생명산업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필요

③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 금융중심지로서의 비전 제시

- 세계의 주요 금융중심지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전북 혁신도시가 지향하는 금융중심지도 디지털금융의 미래와 관련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결합할 수 있다면
 - 향후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방향과도 부합할 것임

Ⅲ. 향후 정책방향

- ◇ 금융중심지를 조성하는데 장기간의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 추진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검토

① 금융중심지 내실화 노력을 지속 추진

-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은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기초 구축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과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음
- 다만,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원인이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 지향,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 등 (예: 언어·지리적여건·법체계)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 불리한 국내 환경을 극복하고, 아태지역內 주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정책노력을 꾸준히 집중할 필요

②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관련 향후 방향

- 서울·부산 이외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금융중심지 발전 여건의 성숙도를 지속 점검하고 엄격한 원칙하에 추가 지정문제를 검토

< 추가 지정문제 검토 요건(예시) >

- ① 금융중심지 모델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지속가능할 것
- ② 수립된 이행계획이 모델 달성에 적합하고, 명확하며 실현가능할 것
- ③ 이행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되어 금융중심지로서 성공가능성이 가시화될 것

- 추가 지정문제 검토과정에서, 잠재적 후보지역의 ‘현재 여건’ 뿐만 아니라 ‘미래 가능성’도 반영하되, 금융회사 유치 여부, 정주·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예: 현재 이행 중이거나,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있는 경우

참 고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 금융중심지법령에 따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정 요건을 심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음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및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후, 지자체에 금융중심지 지정계획 통보
- (신청) 법령상 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
 - * 시·도지사는 지정 신청에 앞서 개발계획안 작성 및 공고(20일 이상)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함
- (심의)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중심지추진 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심의하고 금융위에서 지정

< '09년 금융중심지 지정시 절차 >

- ① '08.6~7,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방안 및 평가 방안 등 심의(금추위)
- ② '08.8.5, 지자체에 금융중심지 추진계획 통보
- ③ '08.11, 5개 시·도(서울·부산·인천·경기 고양·제주)에서 지정신청
- ④ '08.12.3, 금융중심지 지정 평가단 구성(민간전문가 16인, 금추위)
- ⑤ '08.12.4~, 평가단 평가활동 실시(지자체 합동설명회, 현지실사 등)
- ⑥ ~ '09.1.20, 평가단 평가보고서 작성
- ⑦ '09.1.21, 금융중심지 지정 심의(금추위)
- ⑧ '09.1.28,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의결(금융위원회)